

# 대학교육 개혁의 자율과 타율

송석구 |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전 동국대 총장)

내가 대학총장이 되었던 1995년, 김영삼 정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한 단계적 자율화와 함께 대학 설립준치제를 시행해 운동장이 없어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대학원 대학의 설립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학부제를 실시하도록 정책을 확립하고 정책을 따르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 교육개혁 우수대학을 선정, 재정 지원을 도모했다. 이와 더불어서 최소학점 인정제와 복수전공 활성화 등을 추진했으며, 교육개혁 추진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진행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일부 교수 및 비인기학과들은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하간 우리 대학 교육은 '5·31 교육개혁안'으로 인해 해방 이후 고착화됐던 미국과 일본의 학제들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김영삼 정부에 이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던 학부제를 폐지하지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미 그때는 4년간의 교육개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던 터라 실제적인 폐지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학부제 개편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고, 결국 참여정부 들어서는 학부제와 학과제에 대한 선택을 대학에 일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대학은 또 한 번의 수난을 겪게 되었다.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던 학부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처럼 학부제와 학과제가 혼재되고 만 것이다. 물론 교육개혁이 천편일률적으로 전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 정책을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펼쳐나가야지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신뢰가 기분이 되어야 인재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제 개혁 또한 긴 호흡을 가지고 적어도 한 세대, 20년 정도는 시행해나가면서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학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면 우리의 대학은 오늘날 복잡한 사회에 필요한 학제 간 통섭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부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이 지금과 같이 혼돈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타율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발적인 고민에서 개혁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학 외부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학부제를 비롯한 여러 개혁 조치들의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육을 맡고 있는 대학 당국이나 교수, 교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토론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여러 개혁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었다면, 혼란과 갈등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와 국민은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며 끊임없는 개혁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주체인 교사, 교수들부터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국제적 교육의 흐름을 잘 살피서 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교육개혁을 자발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사회적 요구, 즉 타율에 의한 개혁만 지속된다면 개혁은 오래갈 수도 없고, 또 다른 도전과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대학들이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허탈하기 그지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사립대학연합회 같은 곳에서 성명서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도 했지만, 과연 그 주장이란 것이 내부적으로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기초로 한 주장인지는 의문스럽다. 본인도 총장을 지냈던 한 사람으로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별다른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어느 사립대학 모임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등록금 산정기준 공개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교육에 필요한 시설 관리 운영비, 교수 및 교직원 임금 등의 산정기준을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률 등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등록금 인하 범위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 덧붙여서 대학 규모별로 예결산 표본 등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소모적이지 않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대학 교육이 한 번 무너지기는 쉽지만 다시 세우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무턱대고 등록금만 대폭 내려 교육을 한다면 글로벌 지식사회 수준을 따라가기 위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가르치는 교수와 교사들의 신분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고, 각종 기자재와 강의실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참다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교육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커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논의 등을 이끌어내고 대학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대학이 이러한 노력들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해나간다면 대학발전기금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재정 건전화를 기반으로 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여가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율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 도서관장, 의료원장, 부총장, 총장 및 가천의과대학 총장,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율곡대상(2000), 정조근정훈장(2003), 일맥학술대상(2003)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한국유물사상', '무상을 넘어서', '불교와 유교' 등이 있다.

---